

현안과 과제

■ 새 정부의 경제 및 대북 정책 기대효과

목 차

■ 새 정부의 경제 및 대북 정책 기대효과

Executive Summary	i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당선	1
2. 새 정부의 주요 경제 및 대북 정책	2
3. 기대 효과	20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경 제 연 구 실 : 홍 준 표 연 구 위 원 (2072-6214, jphong@hri.co.kr)

Executive Summary

□ 새 정부의 경제 및 대북 정책 기대효과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당선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문재인 당선자는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하는 대한민국, 평화롭고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 성장 가능하고 활기찬 대한민국 등의 4대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2대 약속을 제시하면서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새 정부의 주요 경제 및 대북 정책

① 성장

(배경)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장기간동안 2만 달러 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책 요약) 일자리·소득 확대에 기반한 성장 구조 확립, 미래형 및 주력 산업 육성을 통한 저성장 탈출, 사회적 통합 및 복지 형평성을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산업

(배경) 국내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등장’ 등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정책 요약) 이에 문재인 당선자는 ‘4차 산업혁명’ 준비 등 미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제조업 및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③ 통상

(배경) 저부가가치 수출구조로 신흥국의 추격에 취약한 상황에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통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정책 요약) 국내 수출 경쟁력 확보 및 통상 대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출구조 고도화, 중소기업의 한국형 히든챔피언화, 통상 조직 역량 강화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④ 고용

(배경) 최근 국내 노동시장은 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 조건 개선이 미흡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책 요약)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과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등 포괄적인 노동시장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⑤ 복지

(배경) 복지지출 규모가 경제규모에 비해 적은 편에 속해 복지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생활비 지출이 내수침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책 요약) 저소득층 대상 소득지원 및 생활보장 제도가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비 부담 및 가계생활비를 절감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⑥ 인구구조

(배경) 국내 합계출산율은 전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로 고령 사회 목전에 와 있다.

(정책 요약)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을 위해 차등없는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되고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공교육 비용 국가 부담, 자녀의 돌봄 부담 해소, 사교육 경감 등의 자녀 교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것이다. 임신 출산 지원을 확대 하고 저출산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이다.

⑦ 기업

(배경) 장기간의 저성장 및 불확실성 지속으로 수비형 경영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기업 활력이 저하되었고,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 및 기업 효율성 악화 등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정책 요약) 경제력 집중 억제, 지배구조 개선, 법인세 인상 등이 강조된 재벌개혁

정책이 추진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한 양극화 및 불평등 문제 해소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⑧ 남북경협

(배경) 최근 남북관계는 남한의 일관된 정책 추진 결여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으로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정책 요약)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로 정립하고,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교류재개 및 확대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국면 달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 기대효과

(성장)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이 기대된다.** 가계소득 증대와 신산업 혁신 등의 추진으로 저성장 기조 탈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적절한 분배 달성이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산업과 4차 산업혁명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관련 부서를 신설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적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나 민간 부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장 여건 마련도 필요하다. (통상) **수출 경쟁력 및 통상 대응력 강화를 예상한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 신산업 육성 등으로 수출구조의 고도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로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 확대, 통상 조직의 개편 등으로 경제외교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노동시장에선 고용창출력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신규일자리가 공급될 것이고,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대와 비정규직차별 금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정책 등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 **전반적인 복지 확대로 소득격차를 개선시키고 국민의 실질적 생활수준 향상과 내수침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해소되고 소득 격차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생활비 지출 감축으로 국민

의 실질적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여력 확충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로 경기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 노후 불안감 완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초연금 확대, 노인일자리 마련, 국민연금, 퇴직연금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등은 고령층의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국가 재정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노년 인구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구조 확립이 중요하다.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등은 자녀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다. **(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공정경쟁 시스템 구축이 예상된다.** 다만, 재벌개혁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협화음을 최소화해야 한다. **(남북경협) 남북 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경제·사회의 공동체 형성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한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정립과 점진적인 대화 채널 강화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화·체육 교류 확대, 이산가족 상봉 등이 진행되면 남북관계의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여건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신경제지도’,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재개 및 확대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당선

○ (대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

-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약 1,342만 표를 얻어 41.1%의 득표율로 당선

· 19대 대선의 투표율은 77.2%로 18대 대선 75.8%, 17대 대선 63.0%를 크게 상회하였고, 문재인 당선인은 2위 홍준표 후보와 약 557만 표 차이로 당선됨

- 문재인 당선자는 4대 비전과 12대 약속을 제시하면서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

· 정부 기관, 정치 제도 등 개혁, 경제 민주화, 인권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중심인 대한민국 건설

· 일자리 및 경제 성장 동력 창출, 지역 균형 발전 등을 통해 성장하는 대한민국 건설

· 한반도 평화 유지 및 각종 재난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 성평균, 가족·일·생활의 균형 등을 통한 삶의 질이 높아지는 대한민국 건설 등의 비전을 제시

○ 이에 본 보고서는 문재인 당선자의 대선 공약을 분석 후 한국 경제의 향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투표 결과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4대 비전과 12대 약속 >

4대 비전	12대 약속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1.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2. 공정한 대한민국 3.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4.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5.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6.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7.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8.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9. 평화가 보장된 한반도 10.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11.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12. 활기찬 대한민국

자료 : 더불어민주당 제 19대 대선 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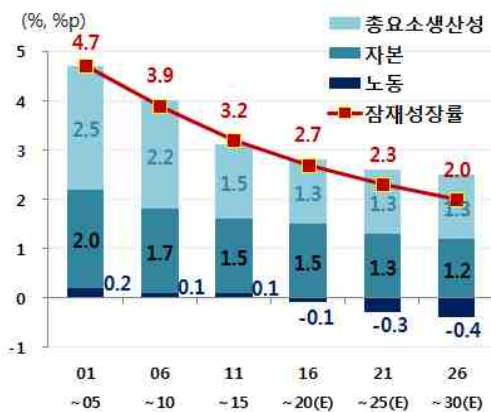
2. 새 정부의 주요 경제 및 대북 정책

① 성장

○ (배경) 한국 경제는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면서 국민소득 정체에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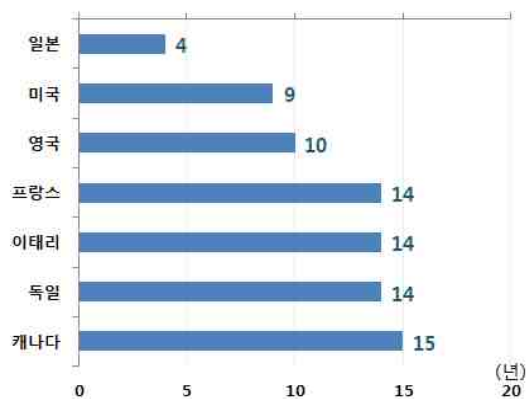
- 우리 경제는 급속한 인구고령화 및 투자 과잉으로 노동 및 자본 투입이 저하되면서 잠재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하락할 우려
 - 한국 경제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간 4.7%에서 2016~2020년간 2.7%, 다시 10년 후인 2026~2030에는 2.0%로 하락 예상
 - 2000년 '고령화 사회¹⁾'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요국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²⁾
- 경제 성장 속도가 저하되면서 1인당 국민소득(GNI)은 2만 달러대에서 정체
 -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G7국가(독일,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태리)의 1인당 GNI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도약하는 기간은 평균 11년
 - 이를 적용하면 2007년에 1인당 GNI가 2만 달러(22,460달러)를 달성한 한국은 향후 1~2년 안에 3만 달러를 달성해야 하지만, 현재의 저성장이 지속되면 1인당 GNI 3만 달러 달성이 쉽지 않을 우려

< 잠재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 G7 국가의 1인당 GNI,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도달 기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World Bank 자료 이용).

1)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사회를 일컫음.
 2)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전된 기간은 미국이 86년, 일본은 36년 소요되었음.

- (정책) 일자리·소득 확대에 기반한 성장 구조 확립, 미래형 및 주력 산업 육성을 통한 저성장 탈출, 사회적 통합 및 복지 형평성을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추구
-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내수 활성화 및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더불어 성장'을 강조
 -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의 혜택이 국민 일부가 아닌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함
 - 성장률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성장의 내용에 관심을 갖고, 분배-성장의 이분법을 넘어 불평등 해소 및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자는 고민에 근거한 성장론
 - 소득 확대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일자리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창출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신산업 및 기존 주력산업 지원 강화
 -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 위원회」 설치,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 법·제도·정책 혁신 추진
 - 창업 지원 자금 확대, 신산업 분야에서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공공데이터 규제 해소 등 창업 분위기 조성
 - 스마트제조업 전략 마련, 1인 제조기업 지원 등을 통한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속
-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방혁신도시 발전, 농어업 지원 등을 통해 협력 및 포용 성장 달성
 -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혁신 프로젝트 추진, 사회적경제 리더 양성,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설치 등 경제 성장의 혜택이 일부가 아닌 참여 시민 모두에게 귀속되는 시스템 구축
 - 지능형 스마트 지방혁신도시 육성,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 발전,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지원 등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 추구
 - 스마트 농업 발전기반 조성, '쌀생산조정제' 도입,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수산직불제 도입 및 어업 세계 지원 등의 농어업 부문 지원 강화

< 성장 부문 주요 공약 및 내용 >

공약	주요 내용
더불어 성장	가계소득 증대 우선,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 등
신산업 및 기존 주력산업 지원	「4차산업혁명 위원회」 설치, 네거티브 규제 전환, 스마트제조업 전략 및 1인 제조기업 지원 등
협력·포용 성장	사회적 기업 육성, 지능형 스마트 지방혁신도시 육성, 농어업 지원 강화 등

자료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공약집.

② 산업

○ (배경) 국내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등장' 등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

-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내 주력 산업의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음

- 제조업의 국내 총 부가가치 증가율은 1970~1985년간 연평균 28.6%에서 2001~2015년간 연평균 6.8%로 축소
- 특히 철강 부분의 국내 총 부가가치 증가율은 동기간 43.1%에서 7.4%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더욱이 서비스업 부가가치 증가율도 동기간 26.6%에서 6.2%로 하락

-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나 준비는 부족한 상황

- UBS(Union Bank of Switzerland)에 따르면 경제·사회 시스템의 유연성이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열쇠가 될 것이고,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 수준, 교육 수준, 인프라 수준, 법적 보호 등 5개 요소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요소라고 발표
- 이들 5대 요소를 바탕으로 국가별로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를 평가한 결과, 한국은 45개국 중 25위로 중하위권에 수준
- 스위스, 미국, 일본, 독일 등이 상위권에 있는 반면, 한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법률체제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해 낮은 순위로 평가

< 국내 주력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 > <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 국가별 순위 >

구분	'70~'85	'86~'00	'01~'15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제조업	28.6	14.3	6.8	1	스위스	9	덴마크
석유화학 및 화학	30.0	13.3	7.2	2	싱가포르	10	뉴질랜드
철강	43.1	14.6	7.4	3	네덜란드	11	스웨덴
기계 및 정밀기기	34.2	15.4	8.0	4	핀란드	12	일본
전기 및 전자기기	37.1	20.0	7.4	5	미국	13	독일
운송장비	29.4	18.4	7.4	6	영국	14	아일랜드
건설업	27.7	14.2	5.0	7	홍콩	25	한국
서비스업	26.6	15.1	6.2	8	노르웨이	28	중국

자료 : 한국은행.

주 :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 UBS.

- (정책) 4차 산업혁명 준비 등 미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제조업 및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 정부와 민간의 협업 모델 구축, ICT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 마련'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플랫폼을 구축
 - 제약, 신재생에너지, 무인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산업 육성과 ICT 기반 및 경쟁력 강화 통해 신산업 촉진 생태계 구축
 - 법, 제도, 정책의 개혁을 통해 미래 산업 육성 및 시장 개발을 촉진
 - 4차 산업혁명과 기존 주력 산업의 융합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재도약 발판 마련
 - 4차 산업혁명과 기존 제조업의 융합을 통해 스마트 제조업 육성
 - 주력산업 사업재편,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등을 적극 지원하고, 금융산업 선진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등 통해 기존 주력 산업의 성장 한계를 탈피
 - 연구개발 부분의 의사결정, 수행 기관 등의 행정체계 정비, 기초 연구 활성화 등 통해 산업 혁신 기반의 역할을 하는데 집중

- 공공 R&D의 역할 충실, 맞춤형 연구개발 인력 육성 등을 통해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 산업 및 4차 산업혁명 부문 주요 공약 및 내용 >

공약	주요 내용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설치 ICT 기반 확충 및 생태계 조성 제약, 바이오, 스마트 카 등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육성 미래 산업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규제 개선
제조업과 주력산업	스마트 제조업 육성 조선, 해운 건설, 금융, 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및 행정체계 개편

자료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공약집.

③ 통상

- (배경) 저부가가치 수출구조로 신흥국의 추격에 취약한 상황에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통상 압력이 가중
 - 저부가가치 수출 구조로 국내에 귀속되는 부가가치가 크지 않고 신흥국 추격에 취약
 - 한국은 수출에서 해외 부품 또는 중간재로 인해 해외 부문에서 유발된 부가가치 비중이 41.6%(2011년 기준)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OECD 평균 및 중국보다도 높은 수준
 - 즉, 한국은 세계 8위 수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부가가치형 수출 구조로 인해 실제로 국내에 귀속되는 부가가치는 크지 않은 상황
 - 저부가가치형 수출구조로는 선진국을 추월하기 어렵고, 신흥국의 추격에 위협받는 샌드위치식 경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장기적으로 미래 수출 성장 동력 확보에 차질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함께 한국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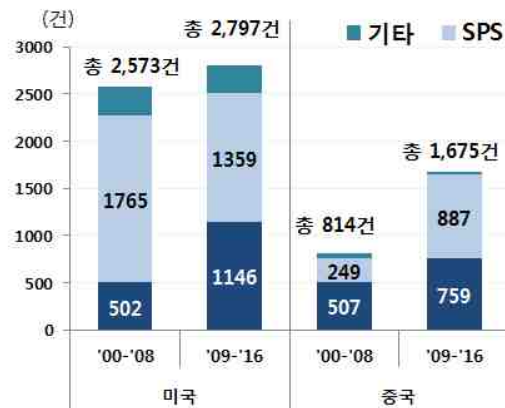
- 최근 한국의 대미, 대중 수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미·중의 대한민국 보호무역 조치는 증가 추세를 기록
- 특히 최근 정치, 외교적 이슈들과 맞물려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확대하고 있어 한국의 수출 회복에 위협이 되는 상황
- 동시에 세계적으로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우려감 확산

< 총수출 중 해외 발생 부가가치의 비중(2011년) >



자료 : OECD.

< 미국·중국의 대한민국 보호무역 건수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1) 2016년은 8월까지 누적 기준.

주2) 기타에는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수량제한, 반덤핑 등이 포함.

○ (정책) 수출 구조 고도화, 중소기업의 한국형 히든챔피언화, 통상 조직 역량 강화 등으로 국내 수출 경쟁력 확보 및 통상 대응력 강화

-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첨단 기술 기반의 신산업 육성 등으로 수출구조의 고부가화, 스마트화 추진

- 제조업 공동화 현상에 대응해 Korean-Made 전략을 통해 국내 수출기반 강화 및 수출 부가가치 고도화 추진
- 스마트공장 확대, ICT 생태계 확충,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 지원 육성 등으로 수출 품목의 스마트화 추진
- 친환경·스마트카 산업 육성, 바이오·나노, 지능형로봇, 제약, 드론 등 첨단

3) 현대경제연구원 '미중의 대한민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경제주평 16-41, 2016.10.14.

기술 기반의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수출 동력 마련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및 기여도 확대
 -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로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를 확대
 -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해외 직판 지원 조직 강화, 수출 지원 기능 통합 등 중소기업의 수출 기반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도모
- 통상 외교 역량 강화 및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위한 중심 역할 수행
 -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통상 조직의 외교부 복원, 재외 공관의 해외진출기업 거점 활용 등 통상 조직 역량 강화
 -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한중일 FTA 체결 등을 통해 자유무역주의 질서 확대 추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 자유화의 중심적 역할 수행
 - 호주,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등과 함께 통상 선진국가클럽(일명 '서울클럽')을 구성하여 자유무역에 대한 입장 공유

< 통상 부문 주요 공약 및 내용 >

공약	주요 내용
수출구조 고부가화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첨단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 등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중소기업 역량 강화, 중소기업 수출 기반 구축 지원 등
통상외교 역량강화	통상 조직 재편, RCEP·한중일FTA 체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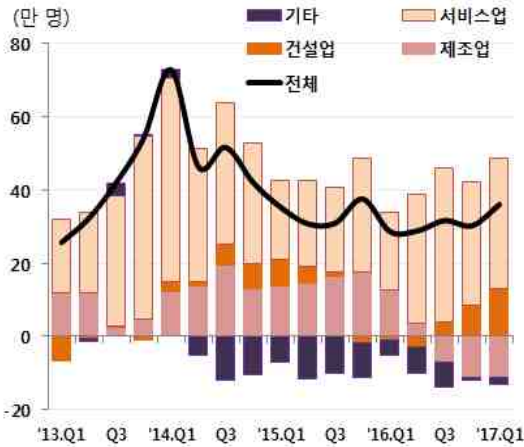
자료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공약집.

④ 고용

- (배경) 최근 국내 노동시장은 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조건 개선 미흡,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 등이 지속
- (일자리창출력 저하) 국내 노동시장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저하되는 모습
 - 2014년 이후 신규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2016년 4/4분기 이후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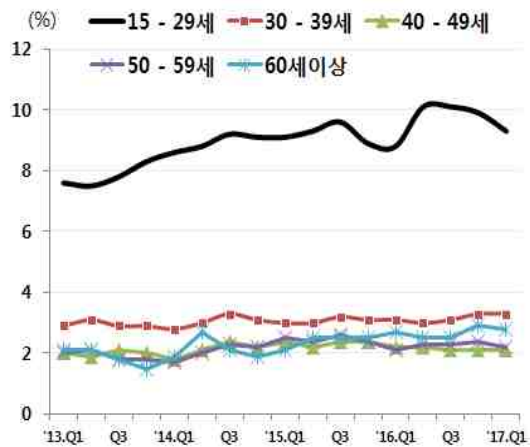
- (청년실업 확대) 특히 15~29세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신규고용은 개선되지 않으면서 실업률이 급증
 - 2013년 이후 30세 이상의 실업률은 2~4%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꾸준히 증가
- (일자리 질적 개선 미흡)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임금, 노동시간, 사회보험 가입률 등 질적 개선이 미흡
 - 또한 근로조건 등 일자리의 질 개선이 미흡하여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성별, 학력-일자리 간 이중구조, 미스매치 현상이 확대

< 산업별 신규취업자수 증감 >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분기대비 증감.

< 연령별 실업률 >



자료 : 통계청.
주 : 계절조정계열.

- (정책) 공공·민간 부문의 일자리 확대, 일자리 질 개선,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 등 포괄적인 노동시장 대책이 포함
-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연령별 일자리 확대 대책 등이 주요 내용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50만개 신규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고용의무 할당률 확대 및 노인 일자리 확대 등
- (일자리 질 개선) 노동시간 단축, 성별·연령별 일자리 질 개선, 최저임금 1만원 및 생활임금제 확산 등이 주요 내용

- 법정노동시간인 주 52시간 준수하고 연간 1,800시간대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 등을 통해 일자리 질 개선
- (노동시장 구조개선) 사회(청년)안전망 도입 및 확대, 해고요건 강화,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금지 등이 주요 내용
 - 청년안전망 도입하고, 실업급여를 확대하며, 정리해고 요건 및 고용승계 의무 등을 강화
 - 또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고,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하며, 공정임금제를 도입하여 일자리 이중구조를 해소
- (노동시장 관리 정책)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동존중 사회 구축을 통한 노동시장 관리 등이 주요 내용
 -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고,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 구축

< 고용 부문 주요 공약 및 내용 >

공약	주요 내용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일자리나누기로 일자리 창출, 연령별 일자리 확대 대책
일자리 질 개선	노동시간 단축, 성별·연령별 일자리 질 개선, 최저임금 1만원 및 생활임금제 확산
노동시장 구조 개선	청년안전망 도입, 사회안전망 확대, 해고요건 강화, 비정규직 축소·차별금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노동시장 관리 정책	일자리 위원회 설치, 노동존중 사회 구축

자료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공약집.

⑤ 복지

- (배경) 복지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비 부담이 증대되어 내수침체의 원인으로 작용
- 경제규모에 비해 복지지출 규모는 작은 편에 속하며 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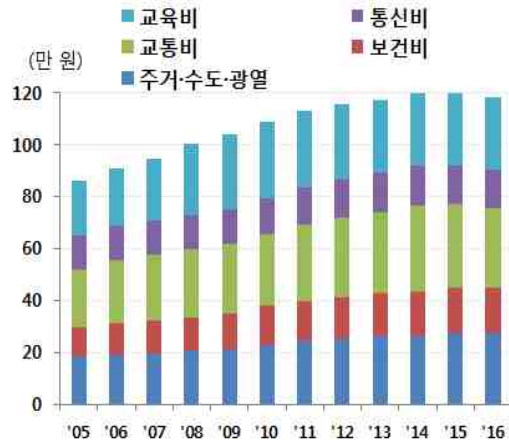
-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그리스, 폴란드, 멕시코를 제외한 32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2013년 기준)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낮은 편
 -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 기능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소득의 성장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생활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생활비 부담 증대가 내수침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
- 주거비, 보건·의료비, 교통비 등 필수적 성격의 지출이 확대되고 있어 여타의 소비재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특히 필수재 지출 부담의 증대는 소득이 낮을수록 실질적인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여 저소득층의 실질 소비여력을 제한함
 - 특히 주거비를 비롯한 생활비 지출의 확대가 최근의 소비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2013년) >



자료 : OECD.
 주 : OECD 평균은 OECD 35개국에 대한 단순평균치로 폴란드, 그리스는 2012년, 멕시코는 2011년 수치 적용.

< 가계 생활비 부담 >



자료 : 통계청.

- (정책) 전반적인 복지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

-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경감시키고 중산층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 및 생활보장 제도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강화
 - 기초연금을 현행 월 10~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여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
 - 비주택 거주자, 시설거주자 등 주거빈곤층과 최저주거미달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소액·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소각으로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개선시키고 취약계층의 생활권을 보장
 - 저소득층에 대한 국공립 유치원, 복지 및 요양시설 이용을 확대

-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 근로여력이 없는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 수용성 교육을 확대·내실화하여 다문화가족 정착을 지원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고용 활성화,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탈시설정책 등 장애인 복지 정책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여 장애인 복지 정책 효율화
 -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

-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
 - 장기 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등 공적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씩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합·재편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청년층에게 공급하고 서울을 포함한 5대 도시에 청년주택 20만호를 확보하는 한편 대학 기숙사를 확대하여 청년의 주거부담을 경감
 -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택 공급하고 주택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

-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가계 생활비를 절감
 - 고교무상교육 실현, 반값등록금 추진, 학자금대출 이자부담 완화 등을 통해 교육비를 절감
 -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감축
 - 정액제 교통카드 도입을 통해 교통비 부담을 약 30% 완화하고 주차비 및 고속도로 요금 인하 등을 통해 교통비 부담 절감
 -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통신 관련 규제를 재정비하여 가계 통신비 지출을 절감

< 복지 부문 주요 공약 및 내용 >

공약	주요 내용
저소득층 지원	소득지원 확대, 저소득층 주거 및 복지지원 강화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근로여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확대, 장애인 권리 향상 등
주거복지 향상	공적임대주택 확충, 청년주택 및 대학 기숙사 확대, 주거 비용 지원 확대 등
가계 생활비 절감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 교육비 절감,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

자료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공약집.

⑥ 인구구조

○ (배경) 국내 합계출산율은 전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로 고령사회 목적에 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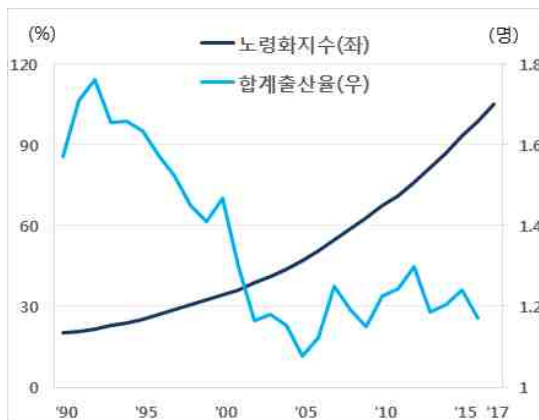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세계 최하위 수준까지 하락

- 비혼과 만혼이 일반화되고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다자녀 출산 기피 등으로 2016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⁴⁾은 1.17명까지 줄어듦

4)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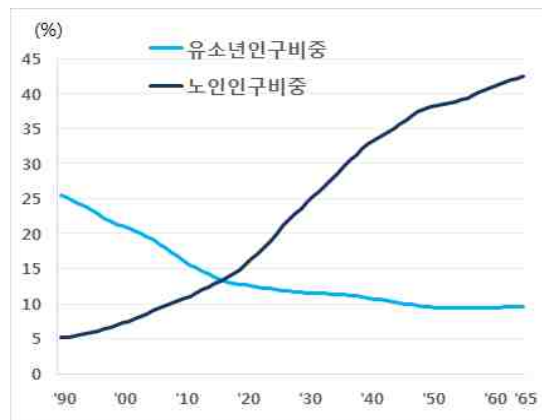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983년에 처음 대체출산율 밑으로 낮아졌으며 현재 합계출산율 수준은 OECD 평균인 1.68명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전 세계 224개국 중 221위에 해당
- 한국은 **고령사회⁵⁾** 목전에 와 있으며 2017년에 노인 인구(65세 이상)가 처음으로 유소년 인구(0~14세)를 앞지름
 - 2017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은 13.8%로 유소년인구 비중(13.1%)을 처음으로 넘어섬
 - 206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인구에서 약 41.0%를 차지할 것이며 노령화지수는 급증하는 추세

< 노령화지수, 합계출산율 >



자료 : 통계청.
 주 : 노령화지수 = $100 \times \frac{\text{유소년인구}(0\sim 14\text{세})}{\text{노인인구}(65\text{세 이상})}$

< 노인 및 유소년 인구 비중 추이 및 전망 >



자료 : 통계청.
 주 :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65세 이상), 유소년인구(0~14세) 비중.

- (정책)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건강 증진 및 여가 확대 등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자녀 교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지원, 저출산 전담기구 설치 등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을 위해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

5) 고령화 사회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 고령 사회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 초고령 사회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

- 현재 월 10~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30만원씩 균등하게 지급하고 노인일자리를 현재보다 2배로 확충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향후 80만개 수준으로 늘리고 임금을 월 22만원에서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초등학교 보안관 등 마을공동체를 위한 사회공익형 일자리를 크게 늘림
-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및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확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상향 조정하는 중장기 방안을 추진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
- 공교육 비용 국가 부담, 자녀의 돌봄 부담 해소, 사교육 경감 등을 통해 자녀 교육 비용 부담을 줄임**
-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의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등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부담 강화
 -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만 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남성(배우자) 공동 휴가 기간을 현재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에서 유급10일, 무급 4일로 확대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2배로 올리고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 임신 출산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전담기구를 설치
 - 난임부부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 공공 난임센터 및 미숙아센터 설치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출산지원금 월 50만원 3개월간 지원
 -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를 정립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상 및 역할을 강화
 - 집중 인구감소 지역에 지원을 늘리고 농어촌 지역 등 지자체 이주민 정착 및 소득 서비스 지원 사업을 강화

< 인구구조 부문 주요 공약 및 내용 >

공약	주요 내용
노후 생활 안착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노인일자리 2배로 확충
건강, 복지 확대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등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자녀교육 부담 완화	공교육 비용 국가 부담, 자녀의 돌봄 부담 해소, 사교육 경감 등을 통해 자녀 교육 비용 부담을 줄임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 근무제 도입
저출산 전담기구 설치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상 및 역할 강화

자료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공약집.

⑦ 기업

○ (배경) 기업 활동 위축 및 효율성 저하 등 기업 부문 경쟁력 약화

-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거나 사업 확장보다 수익성을 방어하는 수비형 경영 전략으로 국내 기업의 내뺏 경영 심화
 -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매출액은 2014~2015년 감소하였으나, 매출액 1,000원당 순이익은 2013년 이후 증가
 -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에 기업 종사자가 증가했지만 이들 중 2/3는 임시·일

용직이며 연구개발비도 전년대비 감소하면서 확장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중점

-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 및 기업 효율성 악화 등 기업 부문 경쟁력 약화

-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등에 따르면, 한국은 지배구조 제도와 관행, 법 집행, 지배구조 문화 등에서 후진성을 보여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 측면에서 최하위권에 머물
-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2016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기업 윤리 문제 및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기업효율성 분야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

< 국내 기업의 매출액 및 순이익 >



자료 : 통계청(기업활동조사).
 주1)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산업 대상.
 주2) 상용근로자 50인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 IMD의 국가경쟁력 및 부문별 순위 >

구분	2015년	2016년
국가 경쟁력	25위	29위
정부효율성	28위	26위
경제성과	15위	21위
기업효율성	37위	48위
인프라	21위	22위

자료 :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 (정책) 재벌개혁 및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공정 경쟁 여건 조성

- 경제력 집중 억제, 지배구조 개선, 법인세 인상 등이 강조된 재벌개혁

-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지주회사 부채비율 및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 등 상법 개정 추진
- 근로자 대표를 기업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는 공공부문부터 도입하고 추후에 민간 기업으로 확산

-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정위의 대기업전담부서를 확대하는 등 공정거래 역할 강화
 -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귀(과표 5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 22% → 25%)하고 최저한세율은 상향 추진(과표 1,000억원 초과 기업 17% → 19%)
-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등을 통해 양극화 및 불평등 문제 해소 추구**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과 벤처·창업지원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 확대, 대중소 기업간 임금 격차 해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등을 추진
 - 대기업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과 나누는 ‘협력이익배분제’의 제도화 추진

< 기업 부문 주요 공약 및 내용 >

공약	주요 내용
재벌개혁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공정거래 역할 강화 등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협력이익배분제’ 제도화 등

자료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공약집.

⑧ 남북경협

- (배경) 지난 4년간 남북관계는 남한의 일관된 정책 추진 결여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으로 경색 국면 지속
- 2013년 이후 3차례의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경제협력이 전면 중단되고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가 발표되는 등 단절이 지속
 - 2013년 이후 북한은 3~5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수차례 미사일 발사 등 남북 간 단절 국면을 주도함
 - 2016년 이후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고, 2차례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발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단절이 지속됨

- 남북 간 정치·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인도적 교류도 사실상 중단된 상황
 - 2008년 이후 이산가족 상봉은 감소 추세이고, 남북협력기금의 사회문화협력 지원도 급감하였으며, 인도적 지원도 사실상 중단됨

< 지난 4년 간 남북관계 주요 일지 >

일자	주요내용
2013 2.12	- 北, 3차 핵실험
3.8	- 北,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 판문점 연락 채널 단절 선언
4.8	- 北,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9.16	- 개성공단 재가동
2014 1.16	- 北, 국방위 상호 비방 중상·군사적대행위 중단 제의
2.20	-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10.4	- 北, 황병서·최룡해·김양건 방남(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2015 8.20	- 北, 서부전선 포격도발 사건 발생
8.25	- 南北, 8.25합의(이산가족 상봉, 민간교류 활성화 등)
10.20	- 추석계기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2016 1.6	- 北, 4차 핵실험
2.10	- 개성공단 전면 중단
3.8	- 南, 독자 대북제재 발표(금융제재·해운통제·수출입통제 강화)
9.9	- 北, 5차 핵실험
12.12	- 南, 강화된 독자 대북제재 발표(금융제재 대상 추가 등)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7).

- (정책)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로 정립하고,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교류재개 및 확대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국면 달성
- (정치·군사) 북한 비핵화를 위해 단계적·포괄적인 모든 수단 활용
 - 한·중·일 3국 협력을 통해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
 - 또한 대화뿐 아니라 제재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비핵화 견인

- (경제협력) 남북한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행을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
 - 북한 내 시장 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의 남북경협을 추진하고 점진적 시장통합을 추진
 - 북핵문제 해결 시 동해권에너지·자원벨트,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동해·DMZ 환경·관광벨트 조성 추진
 -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남북 간 ICT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북한 내 ICT 인프라 구축과 남북 공동 ICT클러스터 추진
- (사회·문화) 남북 간 사회·문화·체육교류를 활성화하고 이산가족·국군포로·남북자 문제를 해결
 - 특히 ‘한반도 프라이카우프’를 추진하여 이산가족 신청자의 전원 상봉을 목표로 제시함

< 남북경협 부문 주요 공약 및 내용 >

공약	주요 내용
정치·군사	북핵 대응 안보 강화, 북한 비핵화 달성 제재 및 대화 등 모든 수단 활용
경제협력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행, 남북 시장 통합 추진, 남북 ICT교류·협력사업
사회·문화	남북 사회·문화·체육교류 활성화, 이산가족·국군포로·남북자문제 해결

자료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공약집.

3. 기대 효과

- 경기활성화, 신경제체제 구축 및 남북경협 재개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일자리 질 개선방안 및 채용조달 방식 등을 둘러싼 불협화음 최소화를 위해 섬세한 정책 집행과 사회적 대타협 달성이 우선적으로 필요

- (성장) 가계소득 증대와 신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 기대
 - 공공분야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비교적 정책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저성장 기조 탈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경우, 성장잠재력이 확충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
 - 중소기업 육성,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적정한 소득분배 달성 가능
 - 보육·의료·요양·안전·환경 등 인간다운 삶 영위를 위한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는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질적 경제 성장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산업 및 4차 산업혁명) 적극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
 -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관련 부서를 신설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적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나 민간 부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장 여건 마련도 필요
 - 스마트 팩토리 도입 등 ICT 기술과 제조업의 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으로 기대
 - 과잉 공급 등 주력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산업 구조의 선진화, 고부가가치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
 - 공공 R&D의 기능 및 효율성 강화를 통해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 (통상) 수출구조의 고도화, 중소기업의 수출기여도 확대, 경제외교 강화 등으로 수출 경쟁력 및 통상 대응력 강화 기대
 -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첨단 기술의 신산업 육성, 스마트화 등으로 국내 수출 기반 강화, 수출 부가가치 고도화 등이 기대
 -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로 수출 기여도가 확대될 경우 수출의 대기업 의존도가 줄어들고 나아가 수출과 고용·내수의 선순환 구조 강화 가능

- 국제 통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현 통상 조직의 재편을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조직 개편을 넘어 통상 전문 인력 확충 및 육성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필요
- (고용)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완화 기대
 - 공공·민간 부분의 일자리 확대 정책이 최근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또한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이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상승시키면서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
 - 사회안전망 확대와 비정규직 차별 금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정책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 다만, 일자리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 등이 일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경영 유지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큰 폭의 공공일자리 확대는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또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중 학력-일자리 간 미스매치, 향후 4차 산업 혁명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무능력-일자리 간 미스매치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됨
- (복지) 전반적인 복지 확대로 소득격차를 개선시키고 국민의 실질적 생활수준 향상과 내수침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해소되고 소득 격차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
 - 교육, 의료, 주거 등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생활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생활비 지출 감축으로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여력 확충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
 - 다만, 조세 저항 등으로 복지 재원 확보에 실패할 경우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조세부담의 증가에 따른 소비 및 투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 (인구구조)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정책은 국내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며 출산·양육부담을 낮추는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 기대

- 최근 국내 민간소비 위축이 상당부분 노후에 대한 불안감에 기인한 만큼 기초연금 확대, 노인일자리 마련, 국민연금, 퇴직연금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등은 고령층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문제 해결 등에 도움
- 다만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확대는 국가 재정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노년 인구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구조 확립이 중요
-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등은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

- (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공정경쟁 시스템 구축 기대

- 자본축적, 과감한 혁신, 인력 숙련도 제고 등 성장동력의 지속적 확충 예상
- 변화하는 경제 연건을 반영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개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경제력 집중 근절 등의 공정거래질서 부문에서의 법·제도의 꾸준한 개선 확립 기대
- 규제 품질 및 민주적인 규제 개혁 과정 확립 등 전반적인 규제 개혁 시스템 개선이 예상되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된다면 신산업·신성장동력 확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다만, 재벌개혁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

- (남북경협) 남북 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경제·사회의 공동체 형성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한국 경제 활성화 기대

- 남북관계의 새로운 정립과 6자 회담 재개 등 점진적인 대화 채널 강화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또한 문화·체육 교류 확대, 이산가족 상봉 등이 진행된다면 남북관계의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 ‘한반도신경제지도’,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재개 및 확대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더 나아가 남북한의 경제통합(시장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점진적인 평화통일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불협화음 최소화를 위해 섬세한 정책 집행과 사회적 대타협이 무엇보다 중요
 - 경제정책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새정부가 앞서 장서 원활한 소통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리더십 발휘 **HRI**

【성 장】	홍 준 표 연구 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산 업】	정 민 연구 위원	(2072-6220, chungm@hri.co.kr)
【통 상】	백 다 미 선임연구원	(2072-6239, dm100@hri.co.kr)
【고 용】	오 준 범 선임연구원	(2072-6247, jboh19@hri.co.kr)
【북 지】	김 수 형 연구 원	(2072-6217, soohyung@hri.co.kr)
【인구구조】	김 천 구 연구 위원	(2072-6211, ck1009@hri.co.kr)
【기 업】	홍 준 표 연구 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남북경협】	오 준 범 선임연구원	(2072-6247, jboh19@hri.co.kr)